

국가와 행복: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에 대한 실증연구의 경향 및 쟁점*

김서용**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와 행복 간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의 경향, 쟁점을 분석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독립변수로서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실증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을 분석한 결과, 국부와 행복간 관계에 대한 일관성있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으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이 존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 행복 등 이론적 개념요소들의 개념화 및 이들 개념간 비교론적, 통합적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이론차원에서 분석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개발 및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모형차원에서는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을 기본요소로 하는 통합적 이론과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측정차원에서 일관성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측정방법과 측정척도에 대한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국가와 행복, 불평등, 정부역할

I. 서론

본 연구는 국가수준에서 소득, 불평등, 정부역할 등 세 가지 요소와 행복간 관계에 대한 연구흐름을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필요한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 S1A3A2075609).

**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연구관심분야는 환경정책, 관료행태론, 인사행정, 성과관리 등이다(seoyongkim@ajou.ac.kr).

이유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국가수준에서 경제적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Easterlin 1973, 1995, 2010; Hagerty & Veenhoven, 2003). 하지만 이와 같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수준과 행복간 관계에 대해 이론적, 방법론적 논란이 존재하며, 특히 경제적인 부의 내용적 측면 중 하나인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란도 여전하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적인 부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 실체라는 점에서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간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가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는 (1)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가 규범적 정당성 차원에서 국가의 목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불평등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현대국가의 가장 큰 특징인 복지국가의 구성논리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정부는 국가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경제적 소득과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행복과 관련된 정부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정부의 정당성의 출발점이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 제고에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인간 삶의 다른 목표들과는 달리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자명한 목표인 것이며,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이다(우창빈, 2013). Veenhoven (2010)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기준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건전한지에 대해 묻고, 이에 반대되는 이론적 논의와 이의 경험적 검증을 통해 이 기준을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제1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 Layard(2005)도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여 정부가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또 어떻게 하면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우창빈, 2014).

이와 같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행복에 대한 관심은 행복과 관련된 국가차원에서 지표관리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부

1) 행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자유주의와 온정주의 간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자유주의자들은 행복을 이유로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Frey & Stutzer, 2009), 이는 정부가 복잡한 정책과정을 고려하지 못하며, 사람들이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현실적으로 행복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정부가 행복지수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우창빈, 2013). 국가의 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은 온정주의자들의 주장(Sustein et al., 2007)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간들이 늘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이규상, 홍훈, 2009).

탄은 GNH(Gross National Happiness), 영국은 GWB(Gross well-being) 등을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도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한 나라' 순위에서 전 세계 156개국 중 54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최근 5년간 순위는 47위(2015년) → 58위(2016년) → 56위(2017년) → 57위(2018년) → 54위(2019년) 등으로 대체로 5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이다.

본 연구는 국가수준에서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 등 세 가지 요소와 행복간 관계에 대한 연구흐름을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국부-행복, 불평등-행복, 정부역할-행복간에 대한 기존 연구를 리뷰하고 각각의 관계 별로 존재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을 정리한다.

II. 국부와 행복

1. 연구경향

Layard(2005)는 행복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행복 향상의 정도는 GNP 성장에 대한 측정과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 147). 국가적 수준에서 '부'는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삶의 질의 증진을 가져온다. 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개인들은 보다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개인들을 만족시킨다(Evans et al., 2019). 경제수준과 행복에 대한 초기연구들은 국가수준에서 국부와 행복 간 관련성 여부 및 정도를 핵심 연구주제로 삼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한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 경제발전의 단계, (2) 대상국가(군), (3) 맥락과 시기별로 경제수준과 행복간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국가수준에서 국부와 그 변화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Easterlin 1973, 1995, 2010; Hagerty & Veenhoven, 2003). 국가수준에서 국부는 경제적 수준인 GDP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국부와 개인적 부를 연계시키기 위해서 일인당 GDP 수준이나 변화정도가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수준과 행복간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Easterlin 1973, 1995, 2010)와 있다는 연구(Inglehart, 1990; Hagerty &

Veenhoven, 2003)로 구분된다. 국가수준에서 경제적 수준과 행복에 대한 연구의 관심은 국가수준에서 소득상승은 행복상승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Easterlin의 행복-소득 역설에서 출발한다(Easterlin, 1973, 1974).²⁾ Easterlin(1974)의 분석결과에서는 첫째, 주어진 사회내에서 부자인 구성원들이 가난한 이들에 비해 행복하다(미국내에서 최상소득계층은 56%, 최하위 소득계층은 29%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함). 둘째, 14개 국가를³⁾ 비교할 때 부유한 국가의 행복도와 가난한 국가의 행복도간 차이가 나지 않는다. 14개 중 10개 국가의 소득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의 행복점수는 2점 범위(10점 만점)내에 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행복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소득증가에 따른 행복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때 미국 내에서 소득이 높아지는 동안 행복이 높아지는지 명확하지 않다.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간 행복도의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Easterlin(1973)은 개인들이 후생을 판단할 때 재화의 절대적인 양이 아닌, 개인들이 필요(need)하다고 생각하는 양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양보다 적다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그때 비교의 준거가 되는 ‘필요(욕구)’는 어떤 속성을 가지는가? 첫째, 개인이 가진 욕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개인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주어진 사회내 존재하는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⁴⁾ 둘째, 특정사회에서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상대적 욕구의 수준과 소비 규범이 상향된다.

국가적 수준에서 소득상승과 행복 간 정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Easterlin(1974)은 다양한 설명을 제공한다. 첫째, 절대적인 소득이 아닌 상대적 소득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상대적 소득 이론에서는 특정개인이 소득에 기반한 소비지출로 인해 얻은 ‘효용’은 지출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판단준거로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지출 대비 자신의 지출 비율의 함수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 지출이 많은 경우

2) Easterlin(1973)에서는 소득이 낮은 개인에 비해 높은 개인들이 더 행복하다. 하지만 국가적 수준에서 볼 때 부가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첫째, 시계열적으로 볼 때 미국의 전후 일정기간 동안(1946-1970년)에 소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 행복이 57년에 최고점에 도달하였다가 70년에는 초기수준으로 복원되었다. 둘째, 잘사는 국가와 못사는 국가를 비교할 때 소득에 따른 행복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부국과 빈국간 행복의 유사성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문화와 같은 기타 요소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Easterlin은 이것을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3) 분석 대상은 미국, 서독, 이스라엘, 폴란드, 일본, 쿠바, 유고, 파나마,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필리핀, 이집트, 인도, 나이지리아이다.

4) 사회적 수준에서 소비규범, 소비문화, 열망수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에 행복을 느끼며 반대로 지출이 적은 경우 불행을 느낀다. 이때 중요한 쟁점은 (1) 개인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점, (2) 판단준거로서 비교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점이다. (1)과 관련해 특정국가내에서 개인의 소득증가에 따라 개인 행복이 높아질 수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소득증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개인의 상대적 소득은 여전히 변화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소득이 상승하더라도 행복도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2)는 비교대상에서 누구를 참조인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못사는 사람보다는 잘사는 사람이 참고인이 된다.⁵⁾ 이와 같은 두 가지 설명이 결합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소득증가는 행복을 상승시키지 못한다. 둘째, Easterlin(1974)은 판단준거가 되는 참고물은 단순히 주변에 있는 동료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회에 존재하는 물질적 욕망을 의미하는 “소비규범(consumption norm)과 취향(taste)”까지 포함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소비규범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준거기준이 되는 소비규범의 상황은 소득증가에 따른 주관적 안녕의 상승효과를 상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외부효과 문제도 존재한다. 소득 증가로 인한 행복감의 상승효과는 소득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물인 오염, 정체 등의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 넷째, 권력의 문제이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행복을 누리던 기득권층의 권력이 분점되어야만 전반적인 행복이 높아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권력을 가진 기득권이 유지되는 성향이 있다.

국가수준에서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Easterlin Paradox’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후속연구들은 Easterlin의 연구 내용을 지지하거나 부정하는 연구,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는 연구들로 나누어진다.

Easterlin(1995)은 후속 연구에서 추가적인 시계열 자료분석을 통해 국가수준의 소득이 상승해도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증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GSS 자료에 근거하여 볼 때 1972년에서 1991년까지 실제 개인소득이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1973년-1989년 기간동안 유럽 9개국에서도 행복은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58년에 비해 1991년에는 소득이 4배 상승하였으며, 1958년의 높은 소득집단의 소득을 초과하는 인구의 비율이 1991년에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안녕은 개선되지 않았다. 둘째, 국가수준 소득과 행복간에 비선형의 곡선(curvilinear) 관계가 존재한다면 개도국들에서는

5) Easterlin(1974)은 판단준거가 되는 참고물로 단순히 주변에 있는 동료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회에 존재하는 “소비규범(consumption norm)”까지 포함한다. 소비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소비규범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둘 간의 관계가 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개도국들에서 생존수준 이상의 삶의 수준을 누리기 시작하면 주관적 안녕은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삶의 수준이 최소생존수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안녕에 변화가 없다. 셋째, 소득상승에 따라 열망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적응가설을 검증하는 분석에서) 시계열적으로 볼 때 ‘진짜 좋은 옷’, ‘휴가를 위한 별장’을 좋은 삶의 필수품이라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975년과 비교할 때 1988년도에 높아졌다.

Easterlin(1995)은 후속연구로써 (1) 주관적 안녕과 경제발전 관계 분석에서 가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2) 행복은 시간흐름에 따라 등락이 있는데 이러한 동태성에 대한 연구, (3) 경제발전에 따라 물질적 규범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할 때 기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4) 문화적, 정치적 요소(전쟁, 정치적 혼란, 혁명)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최근 Easterlin(2010)은 17개 라틴아메리카 국가, 17개 선진국, 11개 동유럽국가, 9개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행복-소득간 관계를 검증하고 있다. 기존 소수의 국가에서 나타났던 국가소득과 행복간 무(null)관계가 개발도상국가들과 정치체제를 전환한 동유럽국가들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시계열적으로 볼 때 국가수준에서 소득증가-행복 간 관계는 장기적으로 무관계하지만, 단기간의 경우 소득과 행복은 공행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소득-행복역설 가설을 약간 수정한다.

Easterlin의 연구결과에 반해 Inglehart(1990), Schyns(2002), Hagerthy & Veenhoven(2003) 등의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에서의 경제적 소득 상승은 행복감 상승을 가져온다. Inglehart(1990)의 연구에서는 24개국의 비교분석을 통해 1일당 GNP수준과 삶의 만족은 정의 상관관계(.67)를 보이고 있다. Inglehart et al.(2008)의 종단분석(1981-2007)에 따르면 경제적 발전(일인당 GDP 증가)은 삶의 만족과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물론 소득증가에 따라 만족도는 비례하여 상승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둘 간의 관계는 약화되는 반면에 소득증가에 따른 행복상승은 지속된다. 높은 소득을 가진 국가에 사는 국민들이 낮은 소득을 가진 국가의 국민들에 비해 만족도가 높다. Hagerthy & Veenhoven(2003)은 Easterlin(1995)의 자료가 1972-1987년 11개국 자료이며, 모두 선진국인 OECD국가라는 점을 비판하면서 종단자료(1972-1994)를 활용하여 21개국(소득이 높은 국가 5개국, 중간인 국가 7개국, 낮은 국가 9개국)을 분석하고 있다. 21개 중 14개국에서 소득과 행복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중 7개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는 국가는 벨기에뿐이었다. 시계열적으로 볼 때 벨기에를

제외하고 1970년에서 2000년까지 시간경과에 따라 둘간의 관계는 선형적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소득증가에 따른 행복상승의 정도는 집단별로 틀리는데, 1% 국가소득 증가에 따른 행복상승효과는 선진국보다는 이외 국가들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Hagerty & Veenhoven(2003)은 선진국에서 부의 증가에 따라 행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비교에 근거한 상대적 소득가설보다는 절대적 소득가설이 타당함을 보여주며, 적응이 단기간(소득이 증가한 후 2년 정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⁶⁾ Schyns(2002)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부의 증가가 행복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높은 소득은 해외여행, 항해, 등산 등과 같이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행복상승을 유도한다. Diener et al.(1995)의 설명에 따르면 (1) 적당한 자원은 개인으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긍정적 기분(positive mood)을 생성하며, (2) 높은 소득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경제적 발전과 행복간 관계에 대해 둘 간의 관계 유무보다는 시간변화, 소득변화,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행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Inglehart(1997), Inglehart et al.(2008)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1995년-2007년 사이에 조사된 WVS의 자료들에서 (1) 주관적 안녕(삶의 만족+행복) 평균값, (2) 조사년도 중간 지점으로부터 5년전 일인당 국민소득 간 '상관관계'는 .62를 보이고 있다. 일정 경제수준까지는 물질적인 부가 행복증가를 가져오지만, 그 이상에서는 다른 요소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효과는 체감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에서도 행복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에서 행복감이 상승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의 삶과 관련해

6) 본 분석은 상관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변수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Hagerty & Veenhoven(2003)도 통제변수로 민주주의, 여성해방, 생산적 노동자 증가, 소득불평등, 자유, 소비재에 대한 지출, 정부지출, 교육, 친구와 여가 등을 포함하는 지출내용 등이 행복에 미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Easterlin(2005)에서는 Hagerty & Veenhoven(2003)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다. 첫째, 분석에 사용된 21개국 중 7개 국가에서만 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Hagerty & Veenhoven(2003)의 분석에서 미국의 일인당 GDP와 행복간 상관관계는 측정기간(1972-1994)이 짧고, 상이한 서베이에서 도출된 측정문항들을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음을 비판한다. Easterlin(2005)이 GSS자료만을 사용하여 1972-2002년간 자료를 활용한 결과에서는 일인당 GDP와 행복간 관계가 없다. 셋째, 대부분 유럽국가들(21개국 중 14개)이다. 넷째, 기술적인 분석에서 유사한 수준의 GDP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들이 행복도 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행복점수의 변화가 기타 요인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득-행복 간 관계에서 주관적 안녕의 지속적인 상승은 사회구조와 개인가치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결핍(scarcity)된 상황에서 개인들은 생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신체적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지만 경제적 발전을 통해 결핍상태에서 벗어나면 자기 표현적 가치나 자유선택과 같은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 Inglehart & Welzel(2005)은 1981년 이후 자기표현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민주화, 양성평등에 대한 지지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주로 선진국에 적용되며 따라서 선진국에서 행복감은 상승한다. 아울러 소득과 행복간에 존재하는 조절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Easterlin 역설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존재한다. 구교준 등(2014)은 소득과 행복간 관계에서 삶의 역량이 조절변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경제발전과 행복간 관계에서 비선형적 관계를 연구하는 논문들이 많아지고 있다. Proto & Rustichini(2013)의 연구에서는 일인당 GDP가 15,000달러가 될 때까지 GDP증가에 따라 삶의 만족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30,000달러 수준에서 최고점을 보이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분석범위 측면에서 최근 연구들을 볼 때 분석대상 국가와 시간적 범위를 계속적으로 넓혀오고 있다. Easterlin(1974)은 14개국, Inglehart(1990)은 24개국, Hagerty & Veenhoven(2003)은 21개국, Easterlin(2010)은 44개국, Inglehart et al.(2008)은 1981년-2007년(5 Wave), 52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방법의 경우 단순한 기술 분석(특히 상관관계분석)에서 다변량 분석으로, 횡단연구에서 종단연구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상호작용분석, 다수준분석(Inglehart et al., 2008)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⁷⁾ 상호작용 분석에서는 미시적 변수들에 대한 거시적 변수들의 조절효과가 분석의 초점이 되고 있다.

2. 쟁점

1) **설명모형의 통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이 행복의 결정요인 설정에 있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균형적으로 설정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행복결정에는 경제요소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정부 요소

7) Inglehart et al.(2008)는 개인수준과 국가수준 변수들간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사회가 부유해질수록 가구소득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는 감소하는 반면, 개인적 자유가 미치는 효과는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정치적 요소에 대한 연구들은 민주주의에 주목하고 있다(Inglehart & Klingemann, 2000; Frey & Stutzer, 2006; Inglehart et al., 2008). 개인적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은 개인의 행복감을 높인다(Frey & Stutzer, 2006). Inglehart & Klingemann(2000)의 연구(1981년-1998년 자료, 62개국)에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Freedom House의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 점수)과 국민 만족/행복간 관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Inglehart et al.(2008)의 연구에서 민주주의 요소인 '자유로운 선택'은 삶의 만족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이념도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 Radcliff(2001)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소인 민주주의 경쟁, 정부의 이념적 복합성, 복지국가 특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6개 서유럽국가 소속 1,134,384명의 응답자를 포함하는 1970년에서 2002년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한 Okulicz et al.(2014)의 연구는 주관적 안녕이 가지는 정치적 패러독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가수준에서는 보다 자유주의적일수록, 개인 수준에서는 보다 보수적일수록 주관적 안녕 수준이 높다. Diener et al.(1995)에서는 인권적 요소가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요소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행복결정에서 건강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건강과 관련해 Ngamaba et al.(2017)는 1980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게재된 29개 논문을 분석한 후 건강상태와 주관적 안녕 간 관계가 중간정도의 유의한 정의 관계(pooled $r = 0.347$, 95% CI = 0.309-0.385; $Q = 691.51$, $I^2 = 94.99\%$, $P < 0.001$)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주관적 안녕이 행복보다는 삶의 만족으로 조작화될 때 건강과의 관련성이 높아지며,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건강과 주관적 안녕간 관계가 높으며, 단일측정항목보다는 다수측정항목이 사용될 때 둘 간의 관련성이 높았다. 사회적 요소로서 종교성에 주목한 Inglehart et al.(2008)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성은 주관적 안녕을 높이고 있다. 사회적 요소로서 사회적 자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Bjørnskov(2003)의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일반화된 신뢰)이 행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Oishi et al.(2011)는 공정성과 신뢰 지각이 소득불평등과 삶의 질 간 관계를 매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Ram(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Diener et al.(1995)는 문화적 속성 중에서 개인주의는 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관적 안녕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2000년 이후 정부의 역할과 행복 간 연구가 새로운 연구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Di Tella & MacCulloch, 2005; Bjørnskov et al., 2007; Tavits, 2007; Eiji, 2009; Ott, 2010).

이와 같이 경제적 요소 외에 정치, 사회, 정부 요소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이들 간 관계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는 소수이다. Inglehart et al.(2008)의 경우 정치적 측면에, Bjørnsvik et al.(2007)는 정부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건강관련 변수들이 간과되고 있다. 반면 Deaton(2008)의 건강-삶의 질간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변수 외 정치적, 사회적 요소는 간과되고 있다. 불평등-행복에 대한 주요연구들은 경제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치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2) 행복을 시계열적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복이 안정적인지, 동태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상이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즉, 국가수준에서 삶의 만족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연구결과(Inglehart & Klingemann, 2000)와 동태적으로 변화한다는 연구결과(Inglehart et al., 1981)로 구분된다.⁸⁾ Veenhoven & Hagerty(2006)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행복은 평균적으로 연간 .0006씩 높아지고 있다.⁹⁾ Inglehart et al.(2008)는 WVS(World Value Survey, 1981-2007) 자료(최대 5개 Wave) 분석을 통해 주관적 안녕(삶의 만족+행복)¹⁰⁾이 52개국 중 40개국에서 상승한 반면에, 12개국에서는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복의 동태성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대상 국가, 국가군이라는 맥락이 영향을 미친다. Hagerty & Veenhoven(2003)의 연구에서 벨기에는 시계열적으로 볼 때 1987년을 기점으로 행복이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당한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Easterlin, 1974). Inglehart & Klingemann(2000)의 연구에서는 신교 국가군이 주관적 안녕(행복과 삶의 만족도)이 높다. Inglehart et al.(2008)의 연구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경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구공산 국가들의 경우 경제적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 수준과 행복간 회귀선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둘째, 측정문항의 문제이다. 삶의 만족과 행복의 변화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¹¹⁾ Inglehart et

8) 개인적 수준에서는 Fujita & Diener(2005)는 17년간의 독일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응답자 만족도에서 초기 5년과 후반 5년 동안을 비교할 때 응답자의 24%의 만족도가 변화했다(6%는 상승, 18%는 감소)는 점을 보여준다. Lucas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15년 종단연구를 통해 결혼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적응과정을 통해 근저점(baseline)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때 일부는 원래 만족도 보다 위에, 일부는 아래에 남아있게 된다.

9) 1946년부터 2005년 사이에 있는 4개의 자료원을 바탕으로 N=127에 대해 분석한 자료이다.

10) 삶의 만족은 10점, 행복은 4점으로 측정되었다.

al.(2008)의 연구에서 행복과 삶의 만족도는 상관성을 갖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 변화의 방향과 정도, 그 결정요인도 다르다. Inglehart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에서 평균 17년이 경과하는 동안 삶의 만족도 증가는 52개국 중 63%, 행복도 증가는 87%에서 나타나고 있다. Inglehart et al.(2008)에 따르면 행복은 민주주의, 종교성의 영향을 받지만, 삶의 만족은 이들 요인뿐만 아니라 일인당 GDP, 타집단 관용도의 영향을 받는다. 결정요인 측면에서 볼 때 삶의 만족은 경제적 수준, 행복은 민주주의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구공산국가들에서는 민주주의 도입으로 인해 행복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는 낮아졌다.¹²⁾

셋째, 시간적 범위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Inglehart & Klingemann(2000)의 연구에서 1973년-1988년 사이 서유럽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안정적이다. Inglehart et al.(1981)의 연구는 1981년-2007년 사이 서유럽을 포함한 52개국에서 주관적 안녕(삶의 만족+행복)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적 범위에 따라 행복이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이유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시간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Inglehart & Welzel(2005)의 분석에서 1981년에서 2007년까지 여성평등에 대한 지지, 타집단 수용성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동태성이 시사하는 바는 행복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구성 및 분석시 분석대상국가(군), 측정문항, 시간적 범위 등을 고려한 접근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행복 관련 연구들은 이론의 일반화를 위해 분석대상(국가)과 시간적 범위를 넓히는 전략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반화를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면 분석대상에 극단치(국가나 국가군)가 포함되거나 일정시간 범위 내에 존재하는 변화의 동태성과 변이를 간과함으로써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분석측면에서 볼 때 분석 대상과 시기에 따라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집단별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국가나 국가군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이 필요하다.

3) 행복의 측정과 관련해 국가단위의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들은 상이하며, 행복을

11) 행복(happiness),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그리고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은 대체로 동일하게 간주되어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Graham, 2011; 우창빈, 2014). Diener et al.(1995)는 주관적 안녕을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평가로 보고 있다. Veenhoven(1984)은 행복을 정서적(affective) 측면과 삶의 만족도의 인지적(cognitive) 측면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12) Easterlin(2010)은 Inglehart(2008)의 연구에 반박하면서 행복과 만족이 공행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측정하는 척도도 상이하다. 삶의 만족도 측정과 관련해 German Social-Economic Panel Study의 경우 11점 척도, World Value Survey와 European Value Survey는 10점 척도, Diener et al.(1985)는 7점 척도, Latinobarómetro 는 4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행복의 경우 World Value Survey에서는 4점 척도로, The General Social Survey(GSS)에서는 3점 척도로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¹³⁾ World Value Survey의 경우 행복 측정척도는 범위뿐만 아니라 응답지 긍정-부정의 순서 또한 삶의 만족도와 반대로 구성되어 있다. 구교준 등(2015)은 행복에 대한 측정이 행복에 대한 철학적 입장 차이, 즉, Hedonism이나 Eudaimonism이냐에 따라 측정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측정방법은 투입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산출중심으로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에서 발표한 Human Development Index(HDI)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주관적 안녕이다.

척도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동일개념이라도 측정척도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Dawes(2007)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는 경우와 10점으로 측정하는 경우 환산평균이 상이하다. 둘째, 일반적인 만족도 측정척도의 경우 응답자들간 특정응답에 대한 답변이 과연 동등성을 갖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5점척도에 대한 답변에서 두 사람이 5점에 답한다고 할 때 응답자간 의미부여는 각기 다를 수 있다. 아울러 어떤 이들은 4점을 최고로, 어떤 이들은 5점을 최고로 부여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Kahneman & Krueger, 2006). 셋째, 응답의 순서효과가 존재한다. Easterlin et al.(2010)은 WVS에서 행복질문에 대한 응답항목의 순서가 조사 차수별로 달라지는 것과 같은 초두편향(primacy bias)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¹⁴⁾

행복측정 방법과 관련된 논란이 존재한다. 측정법과 관련해 행복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설계해 왔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측정기법이 개발되었다(Kahneman & Krueger 2006). 가장 일반적인 측정방법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나 행복(global life satisfaction or happiness)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

13) World Values Survey에서 삶의 만족 측정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요즘 전반적으로 귀하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10점 척도(1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10점 매우 만족함)로, 행복을 “어느 정도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4점 척도(1=매우 행복함, 2=행복한 편, 3=행복하지 않은 편, 4=전혀 행복하지 않은 편)로 측정하고 있다. The General Social Survey(GSS)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귀하는 매우 행복함, 꽤 행복함, 행복하지 않음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행복을 측정하였다.

14) 응답지 순서에 대한 효과는 이경수 등(2008) 참조

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측정방법을 통해 도출한 응답의 문제는 첫째, 응답이 응답자의 현재 기분이나 기억 또는 즉시적 맥락(the immediate context),¹⁵⁾ 날씨, 선행되는 질문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둘째, 매우 짧은 기간에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보고된 삶의 만족이 변동된다는 점이다. 텍사스에 사는 218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2주 간격으로 측정한 결과 상관관계값은 0.59였다(Kahneman & Krueger 2006). 삶의 만족도는 측정하는 문항의 수의 영향을 받는데, Lucas et al.(1996)의 연구에 따르면 4주 간격을 두고 삶의 만족을 다섯 개의 문항으로 측정할 결과, 두 조사문항들은 0.77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과 수입의 상관관계값이 0.90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0.77은 변동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¹⁶⁾ 셋째, 전반적인 만족과 행복은 특정경험 이후에 이에 대한 기억을 통해 측정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기억된 효용(remembered utility)을 의미한다. 기억된 효용은 과거사건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평가시 각 효용들에 대해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 경험의 마지막 기간이나 특정효용사건에 보다 큰 가중치가 부여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Kahneman & Krueger(2006)는 순간 순간 느끼는 기쁨과 고통으로 구성된 쾌락적 흐름(flow)인 경험적 효용(experienced utility)을 매순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경험적 효용은 실시간으로 개인들이 느끼는 효용이라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측정되는 기억된 효용과 차별화된다. 경험적 효용은 순간적 효용의 시간적 합계(temporal integral of momentary utility)를 의미하며, 측정을 위해 실험방법, 경험표본추출방법, 하루 재구성 방법 등이 사용된다. (1) 실험방법은 외생적인 경험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행복과 관련된 특정한 자극을 통해 경험의 효과를 측정한다. (2) 경험표본추출방법(ESM: Experience Sampling Method)은 실험방법과 달리 자연상태에서 개인들이 느끼는 경험의 정보를 모으는 방법이다. 개인들은 컴퓨터를 소지하고 이를 통해 하루에 몇 번씩 위치, 활동, 만난 사람 등과 이것들과 관련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예를 들어 화남, 행복, 피곤함, 인내 등의 감정)을 보고한다. 이 방법의 한계는 대규모 표본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3) 하루 재구성 방법(DRM: Day Reconstruction

15) Schwarz(1987)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설문조사 전 특정 서류 복사를 요청받은 응답자 중 복사기에서 25센트를 발견한 집단의 만족도가 발견하지 못한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6) 물론 이와 같은 표준화된 삶의 만족, 행복 측정방법이 전혀 무용하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항의 변동가능성과 관련된 최근의 무관한 사건이 가져오는 특유한 효과는 대표성을 가진 모집단 표본에서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고적 평가는 후속선택과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미래적 결정은 적실성을 가진다(Kahneman & Krueger 2006).

Method)은 기존 ESM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Kahneman et al.(2004)이 개발한 방법이다. 본 방법은 경험표본추출과 시간일기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개인에게 전날 하루 동안 발생한 일화를 요약하는 일기를 적게 하고, 각 일화별로 세부내용(활동, 장소, 상대 등)을 적게 한다. 아울러 각 일화별로 9개 항목의 감정측정 항목에 대해 답하도록 한다. DRM방법의 결과물과 ESM방법의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DRM 방법에서는 순감정(세 가지 긍정적 감정과 여섯 개의 부정적 감정(역부호화)) 측정을 통해 U(Unpleasant)-index(하루 동안 개인들이 지배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활동에 종사한 시간비율)를 도출한다. Kahneman et al.(2004)은 DRM방법에 의해 측정된 순감정이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순감정과 만족도에 서로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수는 순감정보다는 일반적 만족도를 더 잘 예측한다.

Kahneman & Krueger(2006)가 이와 같이 측정방법 구분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유는 일반적 만족도가 가지는 적응이 만족도의 비변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측면의 소득증가는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는 소득 변화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메커니즘을 통해 적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소득증가 전의 만족도 수준으로 회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소득변화 등의 외생적 사건과 맥락의 변화에 따라 삶의 질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행복을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경험된 효용이라는 개념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Kahneman & Krueger, 2006).

하지만 Kahneman & Krueger(2006)가 제시한 방법과 관련해 Inglehart et al.(2008)는 이들이 측정된 것은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 아님을 비판한다. 아울러 (기억된 효용에 기반한) 일반적인 행복에 대한 질문을 통해 행복은 충분히 측정될 수 있다고 본다.

4) 소득의 개념화, 측정, 분석과 관련해 쟁점들이 존재한다. 소득과 행복간 관계에 대한 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되며, 이론에 따라 관심이 되는 소득이 달라진다(Arthaud-Day, 2005).

먼저 욕구충족이론(need-fulfillment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욕구의 계층성에 근거하여 하위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소득은 기본적인 생리적, 사회적,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 충족되며 더 이상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행복은 곡선적(curvilinear) 관계를 가지게 된다. 본 이론에서 관심소득은 '절대소득'이다. Diener et al.(2003)은 기초욕구 충족이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기

본욕구 충족을 통제된 상태에서 소득과 주관적 안녕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욕구충족 이후에도 소득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개인의 소득구매력과 개인욕구충족 간 관계는 구매력 증가에 따라 욕구충족이 체증후 체감하는 곡선적(curvilinear) 관계에 있다.¹⁷⁾

둘째, 상대적 비교이론에서 인간은 참조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행복하게 된다. 비교이론에서는 비교집단이 누구냐에 따라 행복이 달라지는데, 이때 비교집단을 특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비교이론에서는 주체와 비교집단간의 소득격차를 측정하고 이와 같은 격차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위위의 쳃바퀴효과(positional treadmill effect)'에서는 절대소득(absolute income)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소득이 행복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Clark & Oswald, 1996). 즉, 절대소득이 늘어나도 남들과 비교한 상대소득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복은 소득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다(우창빈, 2013).

셋째, 적응이론에 따르면 인간들은 변화에 적응하기 때문에 행복에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사건들이 주는 충격은 일시적이다. 개인적, 국가적 차원의 소득변화가 절대적 소득보다 주관적 안녕을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Frey & Stutzer(2002)는 소득증가 편익의 2/3가 적응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는 점을 추정하여 보여준다. '쾌락의 쳃바퀴 효과(hedonic treadmill)'는 Brickman & Campbell(1971)에 의해 명명되었으며 흔히 적응(adaptation)이라고도 불리운다. 적응기제가 작동하면 어떤 것이든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를 당연히 여기게 되어 기쁨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넷째, 목표 또는 격차이론에서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소득수준이 충족되었을 때 행복에 도달한다고 본다. 특정 개인이 실제 가진 것과 원하는 수준간 격차가 주관적 안녕을 설명한다. 비교이론에서 특정 판단 주체는 외부에 있는 참조집단과 자신들을 비교한다면 목표, 격차이론에서는 스스로의 비교가 초점이다. 개인적 기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치도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를 선호한다.

이들 이론에 대한 실증연구들을 보면 Stutzer(2004)는 적응이론과 사회적 비교이론에 근거하여 소득증가에 따라 열망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인적 안녕은 절대적 소득수준이 아닌 자신의 열망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이다. 삶의 만족감과 수입에 대한 평가를 각각 '효용'과 '열망수준'이라는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적응이

17) 가치적 측면에서 볼 때 진화적 근대화이론(the evolutionary modernization theory)에서는 문화변화는 사회구성원들이 가진 욕구구조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인간들은 안전이나 경제적 부 등과 같은 물질주의적 욕구를 추구하지만 이와 같은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는 환경의 질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탈물질주의 욕구를 추구한다. 욕구의 차이는 선후진국간, 세대간 문화적 차이를 가져오는 근간이 된다(Inglehart, 2017).

〈표 1〉 행복이론 유형에 따른 소득의 측정치

이론	소득유형	측정치	
		국가 내	국가 간
욕구충족	절대소득	-개인 또는 가구소득	-GDP/GDP/PPP per capita
비교	상대소득	-지역소득분포(최대, 최소, 왜도) -연령코호트 소득 -분위평균소득	-국가소득왜도(skew), 분포(spread) -인접국가 GDP/GNP/PPP (purchasing power parity) -소득불평등(Gini계수)
적응	소득변화	-개인, 가족 소득의 변화 -(다양한 시간 간격)	-일인당 GDP/GNP/PPP -(다양한 시간간격)
목표 또는 격차	지각된 소득	-재정적, 물질적 만족감 -자기보고적 소득 적절성 -자기보고적 소유-욕구간 격차	-집계적인 재정적, 물질적 만족감

출처: Arthaud-day(2005)

론과 사회적 비교이론에서 주장하듯이 개인소득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평균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열망수준이 높아지고 있었다. Arthaud-day(2005)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내에서 절대적 소득은 행복과 약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비교의 효과는 사용되는 측정치에 따라서 달라지며, 소득변화와 지각된 소득의 효과도 비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가 간 절대적 소득 차이는 행복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며, 참조물과의 비교, 소득변화와 지각된 소득에 대한 만족도도 행복을 예측하는 강력한 예측변수이다. Verme(2011)의 연구에서 일반소득은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 소득은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 이론의 경향성과 한계를 보면 첫째,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비교준거(referent)와 비교하는 상대적 소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연구마다 다른 비교준거들을 사용하고 있어 준거간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비교준거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소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2〉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Brown et al.(2015)은 상대적 소득효과가 참고집단의 정의뿐만 아니라 효용의 대리물과 추정방법에 민감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 상대적 소득 연구

연구자	데이터	변수(척도)	준거집단	측정 방법	상대적 소득 효과
Clark and Oswald (1996)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1991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 급여 만족도 (1-7)	개인적 특성 (예상 소득)과 공간(지역, 직업, 산업)	순서 프로빗 (Ordered Probit(OP))	부(-)의 영향
McBrid (2001)	US General Social Survey(GSS) 1994	행복감(1-3)	개인적 특성 (연령)	OP	
Senik (2004)	Russian Longitudinal Monitoring Survey 1994-2000	생활 만족도 (1-5)	개인적 특성 (예상 소득)과 공간(지역, 직업, 산업)	Mundlak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OP	정(+)의 영향
Ferrer-i-Carbonell (2005)	German Socio-Economic Panel 1992-1997	생활만족도 (0-10)	개인적 특성 (교육, 연령, 성별)과 공간 (서독, 동독)	Mundlak를 포함한 RE OP	부(-)의 영향
Luttmer (2005)	1987/1988 & 1992/1994 US National Survey of Families & Households, 1990 Census & Current Population Survey	행복감(1-7)	공간(산업 소득 /소규모 공공 시설 직업)	고정효과에 따른 OLS	
Senik (2008)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ECHP) 14 countries 1994-2001, GSS and European Social Survey	생활, 소득, 경제적 만족도(4-9)	개인적 특성(예상 소득)과 공간(지역, 직업, 산업)	선형 고정효과 & OLS	정(+)의 영향 (동유럽과 발트해) 부(-)의 영향 (서유럽)
Clark et al. (2009)	ECHP Denmark Sample & administrative data 1994-2001	경제적 조건 관련 만족도 (1-6)	공간(구역과 지자체)	선형 고정효과	정(+)의 영향

연구자	데이터	변수(척도)	준거집단	측정 방법	상대적 소득 효과
Mangyo and Park (2011)	China Inequality and Distributive Justice survey 2004	건강 인식 정도 (1-5), 우울감	주관성(스스로 비교하는 그룹) 객관성(공간, 거주구, 자치구, 주)	OLS(표준오차 군집, 지리학적 고정효과를 포함/포함하지 않음)	주관성-건강 (유의미하지 않음), 우울감 (부(-)의 영향) 객관성-건강 (정(+))의 영향), 우울감(부(-)의 영향)

출처: Brown et al.(2015).

둘째, 상대적 비교를 분석하기 위해서 주관적 지표보다는 객관적 지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Diener et al.(1995)는 사회적 비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1) 국가수준에서 이웃국가가 가난한지, 부유한지, (2) 국가수준에서 소득의 왜도 (skewness)가 정의 방향인지, 부의 방향인지(정의 방향인 경우 일부 소수가 많은 소득을 가진), (3) 특정국가에서 소득의 표준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 경우 비교의 참조집단은 이웃국가, 높은 소득계층, 평균 소득계층 등이 된다. 검증결과, 높은 이웃국가가 있을 때 분석대상 국가는 행복하며, 높은 소득계층, 소득분포 정도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소득과 관련해 심리학에서 개발된 미시적 수준의 설명이론에 비해 국가적 수준에서의 설명이론이 부족하다. Schyns(2002)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개인적 수준에서는 욕구이론, 비교이론, 성격이론 등을, 국가수준에서는 삶다움(livability)이론과 국가특성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삶다움 이론에서는 한 사회에서 삶다움이란 집단적 공급과 수요가 개인의 욕구와 역량에 맞는 정도로 정의된다 (Veenhoven, 1995: p.36).

넷째, 소득-행복간 관계에 대한 이론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론 그 자체 또는 이론의 핵심 주장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 즉,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이론들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의 경우 일정소득이 높은 국가군에서 국부가 증가할 때 이에 비례하여 행복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이들 국가에서는 경제적인 소득을 통해 저차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이 소득이 행복을 높이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을 직접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저차욕구충족'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측정연구가 부족하다.

다섯째, 국가수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변수인 GDP는 다양한 한계를 가진다(Fox, 2012). (1) GDP는 상품과 용역의 공급과 소비의 시장적 가치에 기반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가사노동 등은 제외되어 있다. 비공식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내생산이나 암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생산과 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정부의 이전지출도 GDP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전지출은 사회보장지출, 실업수당, 재해보상금 등과 같이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이다. 이전지출은 기업이나 가계가 생산한 것의 일부를 가져와 분배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가 없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3) GDP는 국내총생산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생산된 가치는 배제하고 국외자본이 투입되어 국내에서 생산된 가치는 포함한다. 국외자본이 투자되어 GDP 성장률이 높은 경우 GDP는 늘어나지만 수익의 많은 부분은 다국적 기업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부가 많아졌다고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령 개도국들의 경우 높은 GDP 성장률이 국외투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경제의 질적 측면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기대하기란 어렵다. (4) GDP는 오염비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여섯째, 주어진 분석수준에서 사용되는 변수와 관련해 다른 수준의 값을 투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국가적 수준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자본, 종교성 등의 변수들은 개인적 수준에서 측정된 것을 집계한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Schyns(2002)는 개인수준에서 소득을 집계하여 국가수준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 차원에서 존재했던 특성(오차항)이 제거되기 때문에 집계적 수준에서 상관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Diener & Oishi, 2000: p.198)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다수준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일곱째, 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국가수준에서 소득개념을 대표하는 지표들은 다양하다. Arthaud-day(2005)는 소득변화, 지각된 소득 만족도, 절대적 소득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Schwarze & Härpfer(2007)의 경우 세전소득으로 총수입, 자본수입, 개인간 이전소득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세후소득은 세전소득에서 소득세, 공공이전지불에 부가하여 원천징수세금(payroll tax payment)을 제외하고 계산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 대하여 Diener et al.(2003)은 국가수준에서 일인당 국민소득, 구매력, 소득성장 등과 주관적 안녕 간 관계를 검증하고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 구매력은 주관적 안녕과 정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소득성장은 주관적 안녕과 일관성있는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Commander et al.(1997)의 연구에서는 보다 더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고, 일인당 소득이 높고, 일인당 소득성장률이 높을 때 객관적 삶의 질에 제고 효

과(낮은 유아사망률, 높은 기대수명)가 발생하고 있다.

여덟째, 분석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Schneider(2016)는 소득-행복간 분석에서 결과론적인 질문 중의 하나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이 방법론적으로 다른 척도, 분석방법 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내용적 차원에서 발생하는지 묻고 있다. Inglehart(1990)는 횡단면자료에 근거하여 24개국의 경제적 수준(1일당 GDP)과 삶의 만족간 상관관계(0.6)가 높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발전이 행복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고,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상관관계분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아홉째, 분석대상과 시간적 범위의 차이는 상이한 연구결과를 가져온다. Hagerty & Veenhoven(2003)은 기존 연구들의 분석대상과 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 연구보다 시간적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저소득국가를 분석 표본으로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수준의 소득수준 상승은 행복상승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간적 범위 차이는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일인당 GDP와 행복간 관계분석에서 1972년-1994년간 자료를 활용한 Hagerty & Veenhoven(2003)의 연구에서는 둘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지만, 1972년-2002년간 자료를 활용한 Easterlin(2005) 결과에서는 일인당 GDP와 행복 간 관계가 없었다. 시대적 배경과 사건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Inglehart et al.(2008)는 결정적인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대, 다양성에 포용 확대, 자유로움의 상승을 지적하는데 이는 모두 최근의 변화에 해당한다. 즉 시간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이 행복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인데 이는 기존 연구결과에 다르다. 분석대상에 따른 소득-행복관계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Inglehart et al.(2008)는 부자인 나라들의 경우 경제발전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변곡점을 지났기 때문에, 경제적 소득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측면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부자인 나라인 경우와 가난한 나라인 경우에 따라 연구결과는 달라진다.

시간범위와 관련해 Steven & Wolfers(2008) 연구에 대한 Easterlin(2000)의 비판은 시간적 범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Steven & Wolfers(2008)의 연구는 GDP성장과 소득증가는 삶의 만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국가수준에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한 경우 만족도가 정체되는 안착점(satiation point)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Easterlin(2010)은 이들의 연구가 5-6년 정도의 단기간을 시간적 범위로 하고 있으며, 전환기를 맞고 있는 국가, 극단치(헝가리, 한국)를 포함하고 있어 소득-삶의 만족 간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기간을 늘리거나 전환기 국가들과 극단치를 제외할 경우 성장-만족 간에 무(null)의 관계가 나타

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결국 Steven & Wolfers(2008)의 연구결과가 (1) 통계적인 이유, (2) 단기적 관계와 장기적 관계(최소한 10년 이상)를 구분하지 않은 오류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5) 분석방법과 관련된 쟁점은 국가수준에서 많은 연구들이 행복을 결정하는 인과적 모형과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다수의 연구들이 단순한 상관관계, 회귀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인과기제나 맥락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변수가 간접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nglehart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민주주의가 주관적 안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제발전, '민주화', 사회적 자유화가 지각된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관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민주주의는 주관적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각된 자유에 대한 영향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

Ⅲ. 불평등과 행복

1. 연구경향

국가수준에서 부의 크기가 양적 속성에 해당된다면, 소득불평등은 부의 크기 속에 내재된 질적인 측면에 해당된다. Delhey & Dragolov(2014) 연구에서 소득불평등은 사회적 신뢰를 감소시키고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여 삶의 불만족을 높인다. 다수의 연구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지니계수를 통해 측정하고 이것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Berg & Veenhoven, 2010; Verme, 2011; Rözer & Gerbert Kraaykamp, 2013).¹⁸⁾ 불평등과 행복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둘 간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요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불평등과 행복이 정의 관계에 있다는 연구(Bjørnskov, 2003)와 부의 관계에 있다는 연구(Alestina et al., 2004)로 구분된다. 전자와 관련된 연구로 Bjørnskov(2003)의 연구에서 Gini index로 측정된 불평등은 행복에 정의 영

18) Diener et al.(2003)은 소득불평등 뿐만 아니라, 성평등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Inglehart & Welzel(2005)에서는 여성평등에 대한 지지, 타집단에 대한 포용은 행복감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평등 사회에 존재하는 높은 이동성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Verme(2011)의 연구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가난한 국가와 부자인 국가간에 관계없이 소득불평등이 행복을 증가시키고 있다. Berg & Veenhoven(2010)의 연구에서 소득불평등은 행복을 증진시키지만 행복불평등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후자와 관련해 Alestina et al.(2004)의 연구는 하위집단분석을 통해 저소득 집단과 정치적 좌파집단에서만 소득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불평등과 행복 간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Evans et al.(2019)의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을 종속변수, 일인당 GDP를 독립변수로 분석한 결과, 불평등과 GDP간 곡선적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수준의 불평등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Evans et al., 2019). 단순한 물질주의,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개인과 국가수준의 변형은 주관적 안녕을 높이는 반면에 불평등은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Evans et al., 2019).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장기적 불평등은 개인들을 좌절시키고 주관적 안녕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Esping-Anderson & Nedoluzhko, 2017).

Ngamaba et al.(2018)의 연구는 24개 연구(개인연구, 국가간 비교연구 포함)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소득불평등과 주관적 안녕간 상관관계가 거의 0에 가깝고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ooled $r=-0.01$, 95% CI-0.08 to 0.06; $Q=563.10$, $I^2=95.74\%$, $p<0.001$). 16개 국가에서는 불평등과 소득이 부의 관계, 8개 국가에서는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위집단분석에서는 둘 간의 관계가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예를 들어 선진국: $r=-.06$, 95% CI 0.09-0.02; 개도국: $r=.016$, 95% CI 0.09-.023).¹⁹⁾ 선진국에서는 불평등이 주관적 안녕을 감소시키나 후진국에서는 불평등이 주관적 안녕을 증진시킨다. Reyes-García(2016)의 연구는 국가수준에서 소득불평등은 주관적 안녕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마을수준의 소득불평등은 주관적 안녕을 악화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19) 소득불평등과 주관적 안녕간 관계는 ① 주관적 안녕의 측정도구, ② 지정학적 지역(미국지역과 유럽지역 모두 소득불평등과 행복이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③ 소득불평등의 조작화(삶의 질로 측정하는 경우와 행복으로 측정하는 경우)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표 3〉 불평등과 행복 주요연구

연구	종속변수(측정) (자료원)	초점 독립변수 (측정)	통제변수	주요결과	분석수준/분석방법	표본	시간범위
Alesina et al. (2004)	-행복(3점) -Eurobarometer/GSS	-Gini(-)	-유럽(미국의 경우) -국가수준: 실업률(미국만 -), 인플레이션(-) -개인수준: 실업(+), 저영양(+), 은퇴(+), 학교, 진, 남성(-), 연명 (-), 교육(+), 결혼(+) → GDP 변수 제외	-하위집단 분석: 저소득집단, 정책적 좌파 집단에서만 Gini 가 부의 효과	-가시적 분석/수위로 짓, 공변량 분석 -고정효과 -로버스트	유럽 12, 미국주	1975-1992
Berg & Veenhoven (2010)	-전체적 행복 by 삶의 만족도(10점) -인적적 차원 만족 (contentment)(10점) -감정적 차원(mood) (2점) (WDH)	-Gini → Gini의 비선형효과 없음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전환점을 찾으려 했 으나 찾지 못함)	-일인당 GDP -GDP의 비선형효과 검증 없음	-소득을 통제하지 않을 때 불평등 은 전체행복, 인적적 만족과 부의 관계를 보임 -통제 시 전체행복, 인적적 차원 만족, 감정적 차원과 정의 관계 를 보임	-가시적 수준에서 분석 (/연) 상관관계 분석 -공선성, 고정효과 해당없음	119개국	1994-2004
Verme (2011)	-삶의 만족(10점) (World Value Surveys and the European Value Surveys)	-소득불평등(-)(UNC- Wider Gini, World and European Values 서베이에 기반한 Gini) → 계수값: =GDP/ Income>Gini	-연령(+), 교육(+), 신뢰(+), 가족, 친구, 종교 중요성(+), 실업(-), 연명(-), 일과 장차 중요성(-) -GDP 비선형 검증 없음	-추정방법(Robust, Cluster) 에 따라 SE와 유의도가 바뀜 -고정효과 유무, 대상에 따라 계수값의 방향이 달라짐	-다수준분석/수위로 -다중공선성 점검 -고정효과 -로버스트	84개국/ 1,349지역/ 267,970명	1981-2004

연구	종속변수(측정) (자료원)	초점 독립변수 (측정)	통제변수	주요결과	분석수준/분석방법	표본	시간범위
Rözer & Gerbert Kraay/kamp (2013)	행복(10점), 삶의 만족도(4점, 재취도화)의 평균값 사용 (World Value Surveys and the European Value Surveys)	소득불평등(+) (국가수준=Gini계수) → 계수값: =GDP/Gini	-국가수준: 일당 GDP (+, 비선형검정없음), 사회적 신뢰, 제도적 신뢰(+), ICC=18% -개인수준: 교육(+), 고용, 결혼, 종교, 연령, 성별(남성+), 평등주의(-), 지각된 소득(+), 사회적 신뢰(+), 제도 신뢰(+) -GDP의 비선형효과검증 없음	-소득불평등은 안녕감 제고 효과 과: 개인수준에서 높은 사회적, 제도적 신뢰, 평등주의 강조 시 효과 약해짐 국가수준에 높은 제도신뢰가 존재하는 경우 효과 약해짐	-다수준분석(개인+국가)/회귀분석	85개국/ 195,091	1989-2008
Reyes-García (2016)	삶의 만족(5점):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PEN survey)	소득불평등 +(국가수준=Gini) -(마을수준), (개인수준=절대적 소득, 상대적 소득=마을평균과 비교할 때 가구의 소득 위치)	-절대소득(+), 상대소득(+), 성별, 연령, 가구규모(+), 기혼(+), 질병(-), 충격(shock)(-), 사회적 자본(+) -GDP의 비선형효과검증 없음	-국가수준에서 소득증가는 주관적 안녕 증가(이동성의 상징), 마을수준 불평등은 주관적 안녕 감소(상대적 비교)-수준별 불평등의 효과가 다를	-다수준분석(국가+마을+개인), 패널	게도국 21개국/마을 182/개인 5,945	2006-2010
Evans et al. (2019)	행복(10점), 삶의 만족도(10점)를 결합하여 사용. 통간 상관관계수값은 .66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소득불평등(-) (국가수준=Gini계수) → 계수값: =GDP/Gini → Gini의 Curvilinear 효과 없음	-국가수준: 일당 GDP(+), 비선형효과 검증없음 -개인수준: 성(+), 교회(+), 교육(+), 결혼상태(+), 이혼(-), 소득(+) -결정계수: .14-.21	-국가수준 소득불평등은 대공황 이전 중, 이후에 영향이 없음 -개인적 수준에서 소득은 안녕감 증가	-다수준분석/ -다중공선성 점검 -조정효과	25개국/ 70,000명	371 (2003, 2008, 2012)
장점	-개념화의 문제 -측도의 문제(각기 다른 척도를 복합(composite)하는 문제	-개념화의 문제 -효과의 크기 존재함	-수준의 문제 -통제변수를 무엇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짐 -통제변수의 숫자가 많고, 적용	-맥락(조절효과) 문제: 맥락에 따라 불평등의 효과는 달라짐 -이론의 문제	-분석방법의 문제	-대상의 문제	-시기와 맥락의 문제

2. 쟁점

1) 불평등과 행복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쟁점이 존재한다. 왜 불평등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과 관련해 Schneider(2016)의 경우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한다. 첫째, 거시적인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불평등에 의해 생산되는 외부성(externality)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외부성은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사회갈등(예: 높은 범죄율, 극심한 산업적, 정치적 갈등) 등이며 이는 개인들의 행태를 제약하고, 개인들의 삶의 만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거시적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제도설계는 행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Veenhoven(1995)은 삶다움 가설(livability hypothesis)을 제시하는데, 특정한 제도맥락내에서 객관적 삶의 조건(제도의 삶의 수준=제도의 질적 수준)이 주관적 안녕을 촉진한다고 본다. 삶다움의 정도는 개인의 욕구와 제도차원에서 제공되는 공급간 일치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삶다움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 제도적 인프라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사회적 자본이론에서는 불평등이 공동체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을 저하(예를 들어 가족 외에 취약한 공동체, 제도로부터 오는 사회적 지지시스템을 붕괴시킴)시키고 이것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Kawachi et al., 1997).

둘째, 미시적인 개인의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불평등과 행복간 관계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론이 존재한다.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에 대한 일종의 취향이 존재하는데, 불평등을 사랑하거나 혐오하는 취향(distaste)으로 구분된다. 후자의 특성을 가진 이들은 불평등을 싫어하며 사회적 악으로 간주한다. 불평등이 자신의 취향에 반하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이들의 주관적 안녕을 낮춘다.

불평등과 행복간 관계에 대한 이론들은 불평등이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으로 구분된다. Reyes-García(2016)는 소득불평등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기제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주류 경제학의 경우 소득이 상승할수록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증가로 인한 주관적 안녕의 한계증가분(marginal increases)은 저소득자에 비해 적다. 이를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소득불평등이 사회전반적인 주관적 안녕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개인이 소득불평등을 긍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소득불평등은 “사회적 긴장감”을 발생시켜 주관적 안녕을 감소시킨다. 특히 불평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킨다.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경쟁, 신분차별화를 가져오고 이는 하위계층의 불안감과 사회적 불신의 증가를 유도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이탈행동(예: 높은 범

죄율)의 증가를 가져온다. 셋째, 상대적 소득가설, 상대적 박탈감 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에서 소득불평등은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이는 주관적 안녕을 낮춘다. 예를 들어 자신들이 비교하는 참조집단보다 적게 버는 경우에 행복감을 덜 느끼게 된다. 넷째, Evans et al.(2019)는 정책포획이론에 근거하여 불평등 사회에서 소득분포의 상위에 위치해 있는 이들은 자신의 부를 정치적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부정책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는 보다 많은 이익이 분배되도록 하고, 불우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는 보다 적은 이익이 가게 한다. 결과적으로 보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개인들의 주관적 안녕은 낮아지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평등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소득불평등이 주관적 안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설명과 관련해 첫째, 시장주의 설명방식으로 특정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은 경제적 활력과 경쟁력을 가져오는 유인을 만드는 필요조건이다. 아울러 한 국가의 자유주의적, 기업가적 정책은 불평등을 가져오면서도 불구하고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며, 사회 내에서 개인의 성공을 보장하는 기대수준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높은 행복감으로 이어진다(Rozer, 2013).

둘째, 개도국에서 소득불평등은 하나의 기회나 노동에 대한 유인으로 간주되는 반면, 선진국에서 이것은 위협요인으로 간주된다. Hirschman & Rothchild(1973)는 터널효과를 통해 사람들이 불평등을 용인하는 이유는 소득불평등의 상승을 자신의 신분 이동 가능성에 대한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이를 적용하여 후진국의 불평등과 주관적 안녕과 관계를 해석하면 개도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빠른 성장을 보면서 곧 자신들에게 차례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행복하며, 불평등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대가 실패할 때 이는 분노와 실망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불평등 속에 존재하는 사회의 이동성(social mobility)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Alesina et al.(2014)는 불평등에 대한 유럽인과 미국인의 다른 반응을 이동성이라는 시각에서 해석한다. 미국인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가 이동성이 커서 가난한 사람들도 신분이 상승될 수 있고 부자인 사람들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유럽인들은 이동불가능성에 대한 지각이 높고 이는 불평등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론적 설명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핵심개념’들에 대해 경험적 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 한계효용체감, 자유주의적 기업가적 정책, 사회적 이동성, 포획 등을 직접적인 검증변수로 사용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2) 불평등-행복간 관계에서 맥락의 영향력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 불평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지리적 위치, 경제적 부흥정도, 거버넌스의 질 등이 이러한 맥락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서구, 특히 유럽지역에서 불평등과 주관적 안녕은 부의 관계를 가지지만, 동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삶의 만족이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Berg & Veenhoven, 2010). Helliwell & Huang(2008)의 연구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삶의 만족이 정의 관계를 가지는 반면에, 라틴국가 외에서는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Verme(2011)는 서구와 비서구국가 모두에서 불평등의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²⁰⁾ Graham & Felton(2006)은 불평등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어떤 효과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발전의 정도에 따라 불평등과 행복간 관계가 달라진다. 가난한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은 평균적인 안녕을 끌어올리지만(Helliwell & Huang, 2008; Ott, 2005), 부유한 나라에서는 끌어내린다는(Helliwell & Huang, 2008)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ayte(2012)는 소득불평등이 주관적 안녕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GDP가 낮거나 중간정도인 국가보다는 높은 국가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Rözer & Kraaykamp(2013)는 불평등-행복간 관계에서 보다 다양한 맥락변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이 안녕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개인수준에서는 신뢰와 가치, 국가수준에서는 제도신뢰에 의존적이다. 즉, 소득불평등이 안녕감을 제고하는 효과는 개인수준에서 높은 사회적, 제도적 신뢰, 평등주의 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국가수준에 높은 제도신뢰가 존재하는 경우 약해진다.

이상의 논의를 볼 때 첫째, 이동성에 대한 기대나 실제 사회적 이동성 정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불평등이 행복을 유도한다고 했을 때 불평등이 행복으로 가는 과정 또는 기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나 거버넌스의 구조, 정책수단이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하다. Evans et al.(2019)는 불평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평등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Helliwell & Huang(2008)에서는 나쁜 거버넌스를 가진 국가에서 불평등과 삶의 만족은 정의 관계를 가지지만, 좋은 거버넌스를 가진 국가에서 둘 간에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사용된 표본에 민감하며, 때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3) 불평등의 측정 및 분석과 관련된 쟁점이 존재한다. 불평등 연구에서 불평등을 대 리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지표는 Gini계수이다. Evans et al.(2019)는 소 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Gini계수와 그 제곱 값을 분석하였는데, 불평등과 주관적 안녕 간에 비선형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vans et al.(2019)는 Gini계수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는데, 이는 출산율, 노령화, 가족구조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p.221). Gini계수의 출처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Verme(2011)의 연구에서는 Gini 계수 값을 조사대상 설문지에서 가져왔는지, 외부에서 가져왔는지에 따라 불평등과 행 복 간 관계 방향(부의 관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값의 크기는 달라짐을 보여준 다.²¹⁾

Gini계수 외에 Schwarze & Härpfer(2007)는 Theil Index and the Atkinson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Ott(2005)는 소득분포율(income dispersion ratios)을, Hagerty(2000)는 왜도, 최대, 최소소득을 사용하였다. Diener et al.(2013)는 Longevity Gini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상이한 지수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Reyes-García(2016)의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의 불평등지수인 Gini계수와 마을수준의 불평등지수는 상호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준별로 불평등 지수가 무엇인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평등 지수뿐만 아니라 대상변수인 주관적 안녕의 유형에 따라서도 다른 값을 보 인다. Ngamaba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행복’을 사용한 14개 연구에서 8개 연구 는 부의 관계, 7개의 연구는 정의 관계를, 만족도를 사용한 21개의 연구에서 12개는 부의 관계, 6개는 정의 관계, 3개는 유의하지 않은 관계가 나타났다.

분석방법과 관련해 국가 간 비교에서 통제변수가 무엇인지에 따라 값들이 매우 민 감하게 변화한다. Alesina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은 실업을 통제할 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바뀐다. Berg & Veenvhoven(2010)의 연구에서 불평등과 삶의 만족간 부의 관 계는 GDP를 통제했을 때 정의 관계로 바뀐다. 추정방법에 따라 통계치들이 영향을 받 는다. Verme(2011)의 연구에 따르면 추정방법(Robust, Cluster)에 따라 표준오차(SE) 와 유의도가 바뀌며, 고정효과 유무, 대상에 따라 계수값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21) 행복인 종속변수와 동일한 조사자료에서 만들어진 Gini계수인 Gini WVS의 경우 World and European Values 서베이에 포함된 10등급 소득변수에 중간계층값을 이용하여 만들었 다. 반면 외부에서 가져온 값은 UNU-WIDER database에서 가져왔다.

IV. 정부역할과 행복

1. 연구경향

Layard(2005)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요소로 가족관계, 재정상황, 일, 공동체와 친구, 건강, 개인적 자유, 개인의 차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이들 7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개인의 일과 삶의 조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세(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보다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며, 공동체의 삶을 제고하고 실업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의 삶을 개선해야 하고, 보다 나은 교육(예: 윤리교육)을 추진해야 한다(Layard, 2005).

정부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정부역할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정부의 크기에 따라 행복에 미치는 긍정-부정 영향 여부와 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Scully(2001)는 112개국을 표본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과도한 정부지출이 물리적 측면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정부 크기를 계산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1,105달러에서 3,650달러, 퍼센트로는 정부지출이 GDP 대비 5.6%에서 18.6%가 최적임을 계산하였다. Ott(2005)의 연구에서는 이전지출과 보조금 증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의 소비지출이 증가할수록 행복은 낮아지고 있다. 73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Bjørnskov et al.(2007)는 정부의 일반적인 소비지출이 사람들의 삶의 만족과 부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iji(2003)는 일본정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부크기가 행복에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정부의 크기가 커질수록 삶의 질이 악화되는 이유와 관련해 Bjørnskov et al.(2007)은 공공선택적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크기는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고 이는 대중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정부크기와 삶의 질이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존재하는데, Kacapyr(2008)의 연구에서는 GDP에서 정부지출 비율과 삶의 만족간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Di Tella & MacCulloch(2005)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소비지출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크기를 전체가 아닌 기능별로 분석한 연구가 존재하는데, Veenhoven(2000)은 복지국가의 대리 지표인 사회복지지출이 안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결과는 둘 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am(2009)의 연구에서는 일인당 실질 GDP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만, GDP대비 정부소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Ott(2005)의 연구에서는 GDP에서 사회

서비스 지출, 사회보장지출 비율 등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Ott(2010)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양을 나타내는 대리 지표인 정부소비, 이전 및 보조금, 최고한계세율은 행복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크기 설정과 관련해 GDP대비 정부지출 비율(Di Tella & MacCulloch, 2005; Bjørnskov et al., 2007; Kacapyr, 2008; Ott, 2010), 정부소비지출(Scully, 2001; Eiji, 2009)을 사용하고 있다. Ott(2005)는 이전지출과 보조금과 같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질에 초점을 둔 연구로 Helliwell & Huang(2008)은 World Bank의 거버넌스 지표자료를 활용하여 양적 측면을 나타내는 일인당GDP에 비해 정부의 질이 삶의 만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Ott(2010)의 연구는 정부의 크기보다는 정부의 질이 행복에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질적으로 좋은 거버넌스가 행복을 위한 보편적 조건임을 보여준다. Tavits(2007)는 68개 국가, 유럽 지역 16개국으로부터 수거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질이 좋을 때(부정부패가 없을 때)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Cogburn & Schneider(2003)의 연구에서는 보다 잘 관리되고 효과적인 정부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Ott(2011)에서 정부의 질은 삶의 만족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창빈(2014)은 정부의 기술적 질보다는 민주주의가 행복증진에 더욱 기여한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정부의 양과 질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Hessami(2010)의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크기와 주관적 안녕이 역유자형(an inversely U-shaped relationship) 관계에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복지 지출수준이 낮을수록 보다 더 높은 주관적 안녕이 나타난다. Kim & Kim(2012)의 연구에서 정부의 크기는 행복에 부의 영향을, 정부의 질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 가지 정부의 질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각각 다르다. Ott(2010)는 정부의 질을 민주적 질과 기술적 질로, 정부의 양을 정부소비, 이전 및 보조금, 정부기업 및 투자, 최고한계세율 등으로 구분한 뒤 이들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양에서 정부소비, 이전 및 보조금, 최고한계세율은 행복과 정의 상관관계, 정부기업 및 투자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우창빈(2014)의 연구는 기술적 거버넌스보다 정부의 민주적 질, 민주주의가 행복을 증진하는데 있어 더 중요하며, 이러한 결과가 소득수준이 낮은 개도국에서 더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쟁점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첫째, 정부와 행복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이 부족하다. 앞서 논의한 경제와 행복, 불평등과 행복에 비해 정부와 행복에 대한 이론적 모형이 부족하다. 정부역할에 대한 논의는 다분히 시장-정부라는 이분적 논의에 근거하고 있다. 우창빈(2013)은 행복정책을 수행하는 방법과 수단에 있어 적절성을 강조한다. 단순히 개입이나 아니냐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행복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우려되는 정부의 과도한 사적 개입이나 그 한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정부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해식(2012)은 사회적 질을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네 하위 부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안정성은 사람들이 생애기간 동안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써 재정적 자원, 주거와 환경, 건강과 돌봄, 일, 교육의 다섯 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응집성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규범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뢰, 통합적 규범과 가치,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 정체성의 네 개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제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와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시민권, 노동시장에서의 포용, 서비스, 사회적 관계에서의 포용의 네 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능성은 시민들이 완전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간역량과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식기반, 노동시장, 제도의 개방 및 지원, 공적공간, 대인관계 지원의 다섯 개 하위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이들 하위 영역은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기능적 영역이다. 과제는 이들 영역에 대한 정부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적 부, 불평등과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부가 일정수준을 넘어가는 경우 정부가 경제성장을 통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없다는 잠정적 결론은 정부정책에 대해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먼저 경제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 국가는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보다는 건강이나 사회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대로 경제수준이 일정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부정적 결과인 실업, 직업불안정성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Duncan, 2010).

넷째, 규범적인 질문으로서 행복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이

론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전통적인 정부역할에 대한 논의는 시장의 실패라는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인 축이다. 이때 정부의 개입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보호와 침해방지라는 소극적 경찰국가적 개입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행복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소극적 경찰국가적 개입주의에서 벗어난 적극적 개입주의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사회구성원 간 이루어지는 집합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행복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개별 행위자의 자유영역이 대상이다.

다섯째, 정부의 양과 질 개념을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1) 정부의 양과 관련해 정부크기 측정에서 GDP대비 정부지출과 수입의 비율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대리지표 또는 세부지표에 대한 개발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지표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보면 지출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Ott(2005)의 연구에서는 GDP에서 사회서비스 지출, 사회보장지출 비율 등, Kotakorpi & Laamanen(2010)의 연구에서는 공공의료지출 등이 정부의 양을 대리하는 지표들로 활용되고 있다. Hessami(2010)는 정부의 양적 지표로서 사회복지지출과 교육지출을 비교하고 있다. 유럽 18개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 Kogan et al.(2018a,b)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재의 공급은 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수용하는 국가의 공공재 공급능력이 갖추어지면,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이민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진다. (2) 정부의 질과 관련해 주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의 질과 관련해서는 World Bank의 Governance Indicators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여섯째, 정부와 행복 간 직접효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매개 또는 조절(조건)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논의한 경제(불평등), 정치, 사회관련 변수와 정부역할 간 관계 및 그 내용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Ott(2005)는 제도적 요소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복의 수준과 평등은 맥락에 의존적이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역할도 주어진 맥락에 의존적인 경우가 많다. 주어진 맥락으로서 국부, 민주주의, 사회적 자본 등은 정부역할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 Lapinski et al.(1998)은 Esping-Andersen(1990)이 제시한 복지국가 레짐이 구성원의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Helliwell & Putnam(2004)은 사회적 자본이 독립적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정과 영향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부크기와 행복 간 관계의 비선형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창빈

(2014)의 연구는 거버넌스 지수 6개 전체를 평균한 값(GQ)과 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선형모형의 경우 0.395의 설명력(R^2)을 보인 반면, 이차함수로 추정된 모형은 0.425의 설명력(R^2)을 보였다. 이는 정부와 행복 간 관계가 비선형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는데, 비선형은 단순히 체증후 체감, 체감후 체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비선형적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자료의 통합뿐만 아니라 시기별, 지역별 분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비선형적 관계에 대한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V. 연구의 요약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와 행복간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의 경향,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독립변수로서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와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수준에서 행복의 결정요인과 관련해 경제적인 부와 이것의 변화가 행복에 미치는 경험적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론화와 모형화가 취약하다. 아울러 민주주의, 건강, 사회적 자본, 정부역할 등의 독립변수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복결정에서 이들 변수들과 경제적 부간 역할에 대한 비교연구가 부족하다. 종속변수인 행복과 관련해서는 행복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란, 행복의 측정방법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특히 전자와 관련해 맥락과 시간에 따라 행복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체계적 분석이 부족하다. 분석방법과 관련해서는 단순인과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인과기제나 맥락에 대한 분석이 취약하다. 이와 같은 연구경향은 ① 행복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이론과 모형의 개발과 검증, ② 행복의 측정방법, ③ 맥락과 시간을 고려한 행복변화 분석, ④ 단순인과관계에서 복합적 인과기제와 맥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국부와 행복 간 연구를 볼 때 국부는 주로 GDP를 통해 측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수준에서 경제적 수준의 향상이 행복을 높이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국부와 행복 두 변수간 관계 유무가 아닌 시간변화, 공간변화, 경제발전 이행단계에 따른 국부와 행복 간 관계변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과 행복 간 관계를 설명하는 경쟁적인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이론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부족하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① GDP가 가지는 한계, ② 수준 간 다른 수준의

변수투입문제, ③ 소득 대리지표의 다양성, ④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차이, ⑤ 분석대상과 시간의 차이 등이 쟁점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부와 행복간 관계에 대한 연구의 방향으로는 모형적 측면에서 두 변수간 관계에 개입하는 맥락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론적 측면에서 소득과 행복간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에 대한 검증노력이 필요하며, 방법론적 측면에서 GDP 외의 국부 변수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수준 간 변수 투입방법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대리지표의 다양화, 분석방법 간 비교분석, 분석대상과 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불평등과 행복 간 관계에서는 둘 간의 관계 유무, 영향방향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충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이론들에 대한 검증노력이 부족하다. 측정과 관련해서는 불평등을 측정하는 변수에서 Gini계수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Gini계수 외 다양한 불평등 지표의 발굴과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역할과 행복 간 연구에서는 정부의 양과 질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정부의 양은 GDP규모 대비 정부예산이나 지출의 비중을, 질은 World Bank의 Governance Indicator를 통해 주로 측정되었다. 정부 양과 질을 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발굴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역할과 기존에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국부, 불평등, 건강 등과의 비교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과 행복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규범적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부, 불평등, 정부의 역할과 행복간 변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위험사회에서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거시적인 쟁점들과 행복간 관계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김서용 등, 2014; 서혁준·김서용, 2014; 김서용·유연재, 2014; 설민·김서용, 2015; 박천희·김서용, 2015; 김근식·김서용, 2015), 과학기술(김서용 등, 2010), 환경(김서용, 2006a,b), 이것들과 관련된 가치(유연재·김서용, 2015) 등이 행복에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미시적인 측면에서 정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의 행태(김서용·박원수, 2005; 김서용·박천희, 2017, 김서용, 2017)와 이에 반응하는 주민들의 행태(김서용, 2009)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행위자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의 범위상 다루지 못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정보》, 48(2): 317-339.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21(2): 95-130.
- 김근식·김서용. 2015. “원자력 발전소 연장운행의 정치경제학: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차별지각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9(4): 295-336.
- 김서용. 2006a. “정책과정에서 전문가의 중립성에 대한 실증분석: 문화이론과 Q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한국행정정보》, 40(4): 127-153.
- _____. 2006b. “환경갈등에서 과학기술적 사실의 사회적 구성과 해석: 새만금개발사업에서 수질오염논쟁 분석.” 《ECO》, 10(2): 105-158.
- _____. 2009.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Tiebout 가설과 Hirschman의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모형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정보》, 43(1): 145-169.
- _____. 2017. 일선관료의 고객대응유형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행정정보, 51(1): 31-64.
- 김서용·박원수. 2005.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의 문화적 기반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4(3): 73-102.
- 김서용·박천희. 2017. 일선관료의 직무탈진과 열의분석: 직무요구-자원모형 고객관련 사회적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51(2): 61-95.
- 김서용·유연재. 2014.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한국민의 위험판단 과정에 대한 분석: 휴리스틱-체계적 모형(HSM)에서 정보수신자의 관여와 능력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3): 315-343.
- 김서용·임채홍·정주용·왕재선·박천희. 2014.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와 원자력에 대한 위험판단 분석: 위험지각패러다임과 위험소통모형의 통합 적용을 통해.” 《한국행정연구》, 23(4): 113-143.
- 김서용·최상욱·김동근. 2010. “新과학기술 수용성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19(1): 211-244.
- 박천희·김서용. 2015. “원자력 수용성 결정에서 지식의 효과와 기능: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3(3): 117-150.
- 서혁준·김서용. 2014.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요인 분석.” 《지방행정연구》, 28(4): 283-312.

- 설민 · 김서용. 2015. “경험은 중요한가?: 원전지역 주민들의 경험 효과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49(4): 151-179.
- 우창빈. 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
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51(2): 283-318.
- _____. 2014.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technical) 거버넌스가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가?.” 《행정논총》,
52(1): 219-246.
- 유연재 · 김서용. 2015. 가치, 경험, 지각 - 원자력 수용성에서 가치 및 경험 기반 중
층모형(Multi-layer Model)의 적합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Crisisnomy》,
11(8): 179-201.
- 이경수 · 송현주 · 손영우 · 황명진 · 박영실. 2008. “통계 조사 방법에 대한 인지심리학
적 접근: 선택지의 개수와 순서에 따른 응답의 변화.” 《통계청》, 13(2):
149-181.
- 홍훈 · 이규상. 2009. “자유온정주의와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연구》, 57(3): 171-193.
- Alesina, Alberto, Di Tella, Rafael, & MacCulloch, Robert. 2004. “Inequality
and Happiness: Are Europeans and Americans Differ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9-10): 2009-2042.
- Arthaud-day, Marne, & Near, Janet. 2005. “The Wealth of Nations and the
Happiness of Nations: Why “Accounting” Matte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 511-548.
- Berg, Maarten, & Veenhoven, Ruut. 2010.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In 119 Nations: In Search For An Optimum That Does Not Appear
To Exist.” In Bent Greve, (ed.). *Happiness and Social Policy in
Europe*. Cheltenham: Edward Elgar.
- Bjørnskov, Christian, Dreher, Axel, & Fischer, Justina. A. V. Fischer. 2007.
“The Bigger The Better?: Evidence of The Effect of Government Size
on Life Satisfaction Around the World.” *Public Choice*, 130(3): 267-
292.
- Bjørnskov, Christian. 2003. “The Happy Few: Cross-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1): 3-16.
- Brown, S, Gray, D, & Roberts, J. 2015. “The Relative Income Hypothesis: A
Comparison of Methods.” *Economics Letters*, 130: 47-50.

- Clark, Andrew, & Oswald, Andrew. 1996. "Satisfaction and comparison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1(3): 359-381.
- Clark, Andrew, Westergård-Nielsen, Niels. & Kristensen, Nicolai. 2009. "Economic Satisfaction and Income Rank in Small Neighborhood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7(2-3): 519-527.
- Cogburn, Jerrell. D., & Schneider, Sandra. K.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Government Performance and Stat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6(12): 1337-1354.
- Commander, Simon, Davoodi, Hamid. R., & Lee, Une. J. 1997. "The Causes of Government and the Consequences for Growth and Well-Being."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785.
- Dawes, John. 2007. "Do Data Characteristics Change According to the Number of Scale Points Used? An Experiment Using 5-Point, 7-Point And 10-Point Sc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50(1): 61-104.
- Deaton, Angus. 2008. "Income, Health and Wellbeing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the Gallup World Pol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2): 53-72.
- Delhey, Jan, & Dragolov, Georgi. 2014. "Why Inequality Makes Europeans Less Happy: The Role of Distrust, Status Anxiety, and Perceived Conflic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0(2): 151-165.
- Diener, Ed., Emmons, Robert. A., Larsen, Randy. J., & Griffin, Sharon.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ener, Ed., Diener, Marissa, & Diener, Carol.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851-864.
- Duncan, Grant. 2010. "Should Happiness-Maximization Be the Goal of Government?."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2): 163-178.
- Easterlin, Richard. A. 1973. "Does Money Buy Happiness?." *The Public Interest*, 30: 3-10.
- _____.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aul A. David & Melvin W. Reder.

-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pp. 89-125).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7(1): 35-47.
- _____. 2005. "Feeding the Illusion of Growth and Happiness: A Reply to Hagerty and Veenhonven." *Social Indicator Research*, 74(3): 429-443.
- Easterlin, Richard. A., McVey, Laura Angelescu., Switek, Malgorzata., Sawangfa, Onnicha, & Zweig, Jacqueline Smith. 2010. "The Happiness-Income Paradox Revisite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7(52): 22463-22468.
- Eiji, Yamura. 2009. "The Influence of Government Size on Economic Growth and Life Satisfaction: A Case Study from Japan." *Japanese Economy*, 38(4): 28-64.
- Esping-Andersen, Gø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vans, M. D. R., Kelley, Jonathan, Kelley, S. M. C., & Kelley. C. G. E. 2019. "Rising Income Inequality During the Great Recession Had No Impact on Subjective Wellbeing in Europe, 2003-2012."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1): 203-228.
- Ferrer-i-Carbonell, Ada. 2005. "Income and Well-Being: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mparison Income Effec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6): 997-1019.
- Fox, Justin. 2012. "The Economics of Well-Being." *Harvard Business Review*, 90(1-2):78-83.
- Frey, Bruno. S., & Stutzer, Alois. 2009. "Should National Happiness be Maximized?" In Dutt, Amitava Krishna & Radcliff, B Benjamin. (eds), *Happiness, Economics and Politics: Toward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UK: Edward Elgar.
- Fujita, Fujita. & Diener, Ed.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Hagerty, Michael. R., & Veenhoven, Rutt.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 1-27.
- Helliwell, John. F., & Huang, Haifang. 2006. "How's Your Government? International Evidence linking Good Government and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4): 595-619.
- Hessami, Zohal. 2010. "The Size and Composition of Government Spending in Europe and Its Impact on Well-Being." *Kyklos*, 63(3): 346-382
- Inglehart, Ronald, & Klingemann, Hans-Dietrich. 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In Diener, E. & Suh, E. M (eds.).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pp. 165-183), Cambridge: MIT Press.
- Inglehart, Ronald, & Welzel, Christian.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al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Foa, Roberto, Peterson, Christopher, & Welzel, C. 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 (1981-2007)." *Perspective on Psychological Science*, 3(4): 264-285.
- Kacapyr, Elia. 2008. "Cross-country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with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5(6): 400-416.
- Kawachi, Ichiro, Kennedy, Bruce P., Lochner, Kimberly, & Prothrow-Stith, Deborah. 1997.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9): 1491-1498.
- Kim, Seoyong, & Donggeun Kim. 2012. "Does Government Make People Happy? Exploring New Research Directions for Government's Roles in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 875-899.
- Kogan, Irena, Shen, Jing, & Siegert, Manuel. 2018a. "What Makes a Satisfied Immigrant? Host-Country Characteristics and Immigrants' Life Satisfaction in Eighteen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9(6): 1783-1809.
- Kogan, Irena, Shen, Jing, & Siegert, Manuel. 2018b. "What Makes a Satisfied

- Immigrant? Evidence from Public Health Care.” *Economica*, 77(307): 565-583.
- Lapinski, John S., Riemann, Charles R., Shapiro, Robert Y., Stevens, Matthew F., & Jacobs, Lawrence R. 1998. “Welfare State Regimes and Subjective Well-Being: A Cross-Na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0(1): 2-24.
- Layard, Richard.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London: Allen Lane.
- Lucas, Richard E., Clark, Andrew E., Georgellis, Yannis, & Diener, Ed. 2003. “Reexamining Adaptation and the Set Point Model of Happiness: Reactions to Changes in Marital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527-539.
- Luttmer, Erzo. F. P. 2005. “Neighbours as Negatives: Relative Earnings and Well-Be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3): 963-1002.
- Mangyo, Eiji, & Park, Albert. 2011. “Relative Deprivation and Health Which Reference Groups Matter?.”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6(3): 459-481.
- McBride, Michael. 2001. “Relative-income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ross-Sec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45(3): 251-278.
- Ngamaba, Kayonda Hebert, Panagiotti, Maria, & Armitage, Christopher J. 2017. “How Strongly Related are Health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7(5): 879-885.
- _____. J. 2018. “Income Inequ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Quality of Life Reserch*, 27(3): 577-596.
- Oishi, Shinehiro, Kesebir, Selin, & Diener, Ed. 2011.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Psychological Science*, 22(9), 1095-1100.
- Ott, Jan. 2011. “Government and Happiness in 130 Nations: Good Governance Foresters Higher Level and More Equa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2(1): 3-22.
- _____. 2005. “Level and Inequality of Happiness in Nations: Does Greater

- Happiness of a Greater Number Imply Greater Inequality in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4): 397-420.
- _____. 2010. "Good Governance and Happiness in Nations: Technical Quality Precedes Democracy and Quality Beats Siz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3): 353-368.
- Proto, Eugenio, & Rustichini, Aldo. 2013. "A Re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Life Satisfaction." *PLoS one*, 8(11): 1-10
- Radcliff, Benjamin. 2001. "Politics, Markets and Life Satisfa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Human Happin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939-952.
- Ram, Rati. 2009. "Government Spending and Happiness of the Population: Additional Evidence from Large Cross-Country Samples." *Public Choice*, 138(3): 483-490.
- _____. 2010. "Social Capital and Happiness: Additional Cross-Country Evidenc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4): 409-418.
- Reyes-García, Victoria, Babigumira, Ronnie, Pyhala, Aili, Wunder, Sven, Zorondo-Rodriguez, Francisco, & Angelsen, Arild. 2016. "Subjective Well being and Income: Empirical Patterns in the Rural Developing World."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2): 773-791.
- Rözer, Jesper. & Kraaykamp, Gerbert. 2013. "Income Inequ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 Cross-National Study on the Conditional Effects of Individual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3(3): 1009-1023.
- Schneider, Simone M. 2016. "Income Inequ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Trends, Challenges, and Research Direc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4): 1719-1739.
- Schwarze, Johannes, & Härpfer, Marco. 2007. "Are People Inequality Averse, and Do They Prefer Redistribution by The State? Evidence from German Longitudinal Data on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6(2): 233-249.
- Schyns, Peggy. 2002. "Wealth Of Nations, Individual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in 42 Countries: A Multilevel Approa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60(1-3): 5-40.

- Scully, Gerald W. 2001. "Government Expenditure and Quality of Life." *Public Choice*, 108(1/2): 123-145.
- Senik, Claudi. 2004. "When Information Dominates Comparison: Learning from Russian Subjective Panel Da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9-10): 2099-2123.
- _____. 2008. "Ambition and Jealousy: Income Interactions in the 'Old' Europe versus the 'New'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Economica*, 75(299): 495-513.
- Stevenson Betsey, & Wolfers, Justin. 2008. "Econom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 Working Paper No. 14282.
- Stutzer, Alois. 2004. "The Role of Income Aspirations in Individual Happines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54(1): 89-109.
- Tavits, Margit. 2008. "Representation, Corru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12): 1607-1630.
- Thaler, Richard H, & Sunstein, Cass R. 2003. "Libertarian Paternalism." *American Economic Review*, 93(2): 175-179.
- Veenhoven, Ruut, & Ehrhardt Joop. 1995. "The Cross-National Pattern of Happiness: Test of Predictions Implied in Three Theories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1): 33-68.
- Veenhoven, Ruut, & Hagerty, Michael. R. 2006. "Rising Happiness in Nations 1946-2004: A Reply to Easterli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9(3): 421-436.
- Veenhoven, Ruut. 2000. "Well-Being in the Welfare State: Level Not Higher, Distribution Not More Equitable."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2(1): 91-125.
- _____. 2010. "Greater Happiness for a Greater Number: Is that Possible and Desirabl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5): 605-629.
- Verme, Paolo. 2011. "Life Satisfaction And Income Inequa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7(1): 111-137.

State and Happiness: Trends and Issues in Empirical Research on Wealth, Inequality, and the Role of Government

Seoyo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s and issues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happines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 analyzed empirical papers on the effects of wealth, inequality, and the role of government as independent variables on happines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there was no consistent resul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ealth and happiness, and there exist variou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about those topics. First, it needs the conceptualization of theoretical components such as national wealth, inequality, the government's role, and happiness. Second, theories that can expla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uld be developed and empirically verified. Third, a more integrated theory and model that include national wealth, inequality, and governmental roles are required. Fourth, regarding the measurement level, the measurement methods and measurements to produce consistent results must be developed.

※ Keywords: state and happiness, inequality, role of government